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 총평

수험생 여러분! 오늘 날씨가 봄 같지 않게 쌀쌀했는데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학 시험은 성실하게 공부해왔던 수험생이라면 느꼈을 테지만,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compass행정학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공부해온 수험생들은 문제의 내용과 난이도, 형식까지 유사해서 체감적으로 친숙하게 문제를 풀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00점 받은 제자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번 시험을 어렵게 느꼈다면, 또는 점수가 좋지 않았다면 본인의 공부방법이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학에 대한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필수과목에 집중하면서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시험에 임박해서야 임기응변식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시험을 그렇게 접근해서는 행정학을 절대 고득점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최종합격도 요원해집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공무원 시험은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한 높은 컷으로 인해 필수과목이든, 선택과목이든 남들보다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필수과목이 중요한 건 맞지만, 선택과목을 못하면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차후 시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공부량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 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학 공부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수험생은 행정학 공부에 있어서 문제 중심의 공부방법과 접근법을 모르고 무작정 공부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중심의 철저한 분석과 암기, 문제를 통한 적용훈련 등 수험 중심적 접근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지방직 시험을 대비해서는 꼭 학습법 자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유튜브 ‘난공불락-입체적 회독’강의나 ‘10일 2000제’강의의 오리엔테이션 부분을 수강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받은 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쉬운 결과의 수험생들은 꼭 위의 조언을 명심하시고 심기일전해서 다음시험에는 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2. 출제영역분석

총론	4	재무행정론	4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4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4	지방자치론	1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7	기출변형 문제	3	신유형 문제	—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짚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7	1	2	3	—	1	6

| 말 바꾸기 |

- 0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명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해설】 ① [×]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 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는 전제 하에, 효과적인 조직구조나 관리 방법은 조직환경 등의 상황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 올바른 지문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은 없다고 전제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65

▶ ①

0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②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 ③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 ④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설】 ① [X] 신공공관리론의 관리주의적 논리가 행정 내부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해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공공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정치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관리주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정치적 논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54~157

▶ ①

0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 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한정된 범위와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해설】 ① [O]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X]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합리모형과 대립되는 적응적, 관습적 의사결정모형으로 대안의 탐색과정은 미리 정해진 대안의 래퍼토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③ [O]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 된 사이버네틱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O] 한정된 범위의 변수들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나머지 정보는 무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합리모형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63, 264

▶ ②

summary | 롤즈의 정의론

정의의 제1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동등) 원리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동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정의의 제2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차등조정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차등의 원리 불평등한 상황의 조정 시에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 해야 함(최소극대화의 원리 : maximin).
원리 간의 관계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에서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함.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 ⇨ ② 기회균등의 원리 ⇨ ③ 차등의 원리)
특징	자유 ·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주의적 입장
비판	• 우파(자유의 제한을 초래)와 좌파(정당한 불평등이 아닌 완전한 평등이 필요)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음. • 원초적 상태에서의 최소극대화 원리에 대한 전제의 실현가능성 ↓

▶ 올바른 지문

①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보다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0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 ㅂ. 보조금(grant)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ㅂ
- ③ ㄴ, ㄷ, ㅁ
- ④ ㄹ, ㅁ, ㅂ

【해설】 ③ [O] 직접성이 높은 행정수단은 ㄴ. 경제적규제, ㄷ. 정부소비, ㅁ. 공기업 등이다.
ㄱ. 조세지출과 ㄹ.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행정수단이며, ㅂ. 보조금은 직접성이 낮은 간접적 수단이다.

▶ 올바른 지문

직접성이 높은 행정수단은 ㄴ. 경제적규제, ㄷ. 정부소비, ㅁ. 공기업 등이다.

summary |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수단과 효과

직접성	행정수단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 가능성	정당성
낮음	손해책임법, <u>보조금</u> , 대출보증, 정부 출자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중간	조세지출, 계약, <u>사회적 규제</u> , 벌금	낮음/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보험, 직접 대출, <u>경제적 규제</u> , 정보 제공, <u>공기업</u> , 정부 소비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4, 65

▶ ③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선관료제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 【해설】 ① [×] 일선관료는 인종, 성, 학력, 계급 등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객을 재정의 한 후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회문제 탓으로 하여 책임을 회피한다.
- ② [×]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는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가 존재하므로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 ③ [○] 일선관료는 불충분한 자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 ④ [×] 일선관료는 직무의 자율성이 높고, 많은 재량권을 갖는다.

▶ 올바른 지문

-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객을 재정의 한 후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 ④ 일선관료는 직무의 자율성이 높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은 재량권을 부여 받는다.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 ②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 ③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④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해설】 ① [X]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② [X]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하부기관이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③ [X]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O] 부속기관이란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 본부조직에 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다.
- ②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 ③ 보좌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74~376

▶ ④

0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설】 ① [X]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X] 정직은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동법 제80조【징계의 종류】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O] 감봉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동법 제80조【징계의 종류】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X]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 등을 하지 못한다.

동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summary | 징계의 종류

1. 신분보유

구 분	승급제한	보수(기간)	직무수행	기 타
견 책	6개월	영향 ×	영향 ×	훈계 · 회개
감 봉	12개월	1/3(1~3개월)	영향 ×	
정 직	18개월	전액(1~3개월)	1~3개월 정지	
강 등	18개월	전액(3개월)	3개월 정지	1계급 강등

2. 신분박탈

구 분	처 분	공직취임제한	퇴직급여
해 임	강제퇴직처분	3년간	원칙적으로 제한 ×
파 면	강제퇴직처분	5년간	제한 ○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77

▶ ③

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 【해설】 ① [X] 단식부기는 현금주의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② [O] 단식부기는 거래의 영향을 한 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해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된다.
 ③, ④ [O] 복식부기에서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자기검증기능을 갖고, 부정과 오류의 발견이 용이하다.

▶ 올바른 지문

- ①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70~672



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해설】 ④ [X]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 원칙의 예외로 편성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올바른 지문

-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 원칙의 예외로 편성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88, 614, 615, 616



| 말 바꾸기 |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 ②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최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 ③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 ④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해설】 ③ [X]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론에 정책의 창은 정책문제(problem stream), 정책대안(policy stream), 정치적 흐름(political stream)흐름 등의 세 가지 흐름이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과 같은 점화장치에 의해 결합하게 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

▶ 올바른 지문

- ③ 정책문제(problem stream), 정책대안(policy stream), 정치적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60

▶ ③

| 말 바꾸기 |

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 ③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해설】 ② [X]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은 가장 강력한 수평 연결장치로 사업팀은 영구적인 사업단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장기간 강력한 협동을 요할 때 적합한 장치이다.

▶ 올바른 지문

- ②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조직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42, 343

▶ ②

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② [X] 작성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의하여 제시하며,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20

▶ ②

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 ③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해설】 ① [O] 국가재정법 제73조

국가재정법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X] 결산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된다.

③ [O] 국가재정법 제61조

동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결산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65~666

▶ ②

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 【해설】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우발적)부패이다.
-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사익추구가 없는 선의의 부패인 백색부패이다.
-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 것은 제도화된(제도적) 부패이다.
-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비거래형 부패이다.

summary | 부패의 유형

제도적 부패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부패(관행화 된 급행료)
우발적 부패 (일탈형 부패)	구조화되지 않은 일시적 부패, 개인의 일탈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패(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 것)
백색 부패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사익추구가 없는 선의의 부패.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61, 562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② [O] 지방자치법 제77조

제77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X]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동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O] 지방자치법 제68조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올바른 지문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25 ~ 827

▶ ③

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 ① 상징(symbol) ② 강제력(coercion)
③ 전문성(expertness) ④ 준거(reference)

【해설】 ① [X]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은 합법적(정당한) 권력,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전문적 권력, 준거적 권력으로 상징은 해당하지 않는다.

summary | 권력의 원천

합법적(정당한) 권력	권한과 유사, 일반적으로 상사가 보유하는 직위에 기반한 권력
보상적 권력	다른 사람에게 보상(승진, 급여, 직위 부여)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강압적 권력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
전문적 권력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에 기반한 권력
준거적 권력	다른 사람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 카리스마의 개념과 유사함.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16



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 ③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해설】 ① [O]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 제1항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X] ③ [O]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제4조【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 ④ [O] 전문경력관 규제 제17조 제1항

제1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전문경력관의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73



| 말 바꾸기 |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해설】 ④ [×]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정부×)이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summary |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구 분		배열자(arranger)	
		공공(Public)	민간(Private)
생산자 (Producer)	공공 (Public)	· 정부서비스(government services) · 정부 간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	· 정부우찰(government vending)
	민간 (Private)	· 민간위탁(contracting-out) · 프랜차이즈(Franchise) · 보조금(grant) · 바우처(voucher)	· 시장(market) · 자발적 서비스(voluntary service) · 자급자족(self-service)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4

